

# 방제 작업비도 못받아 주민 생계 막막

## ■ 기름 유출 1년... 전남 서해안 어민 보상 어떻게

### 318개 김 양식어가 턱없는 배상에 속앓이

### 맨손어업 피해자 근거 자료 제시 어려워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을 맞았다. 바닷가와 갯돌에 묻은 기름때가 제거되고 국토부 조사결과 해양 환경도 거의 복구되는 등 겉으로 보기엔 이상이 없는 듯 하지만 타르가 슬고 간 신안과 무안, 영광 등 전남 서해안 어민들은 막막한 보상에 애를 태우고 있다.

태안 앞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해 12월 7일, 타르가 흘러 청정해역인 전남 서해안 일대를 덮친 것은 12월 30일이었다. 자원봉사자 3만명을 비롯해 총 10만명이 방제 작업에 나서 3개월 만에 피해복구를 마쳤다. 하지만 어민들은 보상은 커녕 방제 작업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아우성이다.

◇멀기만 한 피해보상=전남은 총 1만8000가구가 타르 피해를 입었다. 업종별로는 면허 양식 1천87건, 어선 1천302건, 맨손어업 4천827건 등이며 비수산분야는 589건(요식·숙박 등)이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추정해 태안 사고 총 피해

액은 최소 5천663억원에서 최대 6천13억원이다. 지난 6월 추정 피해액 보다 방제작업 비용 278억원이 늘었지만 최대 정점인 수산 및 관광 분야 피해액은 그대로이고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어민들의 주장과 크게 차이 난다.

피해 배상금은 주민들이 피해대책 위원회나 손해사정인을 통해 피해액을 파악, 국제기금에 배상신청을 하면 국제기금이 지정하는 국내 감정인이 이를 사정한 후 지급한다. 즉 피해 접수, 청구, 사정, 승인, 지급 순으로 이뤄진다.

피해대책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1만8000건에 달하지만 국제기금에 배상 청구된 것은 2%, 175건에 불과하다. 어민들이 아직도 피해 접수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빨라야 내년 말까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 배상 신청이 늦어진 것은 피해지역이 넓고 유형도 다양해 손해사정인의 현지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맨손어업의 경우가 피해 선



1년 전인 지난해 12월 타르 덩어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무안군 해저면 승석리 도리포 앞바다. 1일 오후 어민들이 도리포 앞바다 양식장에서 채취한 김을 수확하고 있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청자가 4천827명이나 되지만 보상금 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특히 태안 사고와 관련 유일하게 배상이 이뤄진 태안지역 펜션업자 김모씨의 경우 청구액의 50%만을 받은 상태여서 어민들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가장 빠르게 국제기금에 배상 청구를 한 어민들은 김 양식 어가다.

318개의 김 양식어가는 지난 8월 총 248억원을 배상 청구했다가 국제

유류기금으로부터 50~60% 정도를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듣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턱없이 적은 배상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되살아난 바다, 재발 방지책은 미흡=국토부는 지난 10월 31일 태안지역과 전라남북도 도서지역에 대한 해양오염환경조사 결과, 굴 및 어류 등 어패류를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와 동식물

서식 실태를 정밀 모니터링한 뒤, 내년 2월 복원 프로젝트를 마련해 본격적인 생태계 되살리기에 나선다. 울 초 피해를 봤던 김 양식장에서도 이미 햇김이 출하되는 등 다행히 해양오염 2차 피해는 빚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여전히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1년이 다 되도록 대응매뉴얼은 물론 평가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전남 자치단체 의정비 삭감 '생색내기'

광주·전남지역 29개 자치단체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는 여전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치단체는 의정비를 동결하는 방법으로 삭감을 피하는 '꼼수'를 썼는가 하면 정부의 기준액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서 결정, 의회의 눈치를 본 '생색내기'삭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등도 '퍼주기'식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전남도 등 자치단체에 따르면 1일 현재 광주의 경우 광주시를 비롯해 동·서·남·광산구 등 5개 자치단체, 전남지역에서는 전남도 등 20개 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정비를 결정했다.

### 정부 기준보다 높게 책정

광주시의 경우 올해 4천231만원에서 14.7% 인상된 4천855만원으로, 전남도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올해와 같은 4천748만원으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액(5천16만원)보다는 5% 낮은 반면 전남도는 기준액(4천442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월정수당이 기준액 대비 20% 이내일 경우 심의위 구성 없이 동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동구는 기준액(3천264만원)보다 8% 삭감된 반면 올해 의정비(2천778만원)보다는 11.4% 인상된 3천105만원으로 결정했고 서구는 기준액(3천493만원)보다는 20% 삭감, 올해(2천870만원)보다는 6.5% 인상된 3천58만원으로 책정했다. 남구는 올해(2천911만원)보다 0.3% 인상된 2천919만원(기준액 3천319만원), 광산구는 올해(2천940만원)보다 12% 인상된 3천296만원(기준액 3천468만원)으로 결정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대부분 기준액보다 의정비가 낮게 책정됐지만 올해 의정비보다는 인상된 금액이다.

### ■2009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상황

지역	2009년		2008년		비고
	2009년	2008년	행안부 기준액	비고	
시의회	4,855	4,231	5,016		
동구	3,105	2,778	3,264		
서구	3,058	2,870	3,493		
남구	2,919	2,911	3,319		
북구	-	2,926	3,433	3월 결정	
광산구	3,296	2,940	3,468		
도의회	4,748	4,748	4,442	동결	
목포	3,390	3,840	3,168		
여수	3,324	3,900	3,228		
순천	3,223	3,900	3,115		
나주	2,954	3,804	2,954		
광양	3,672	4,234	3,306		
담양	2,966	3,225	2,866		
곡성	2,903	3,480	2,828		
구례	2,976	3,457	2,785		
고흥	2,947	2,947	2,879		
보성	-	2,460	2,850	2월 결정	
화순	3,144	3,488	2,920		
장흥	2,864	2,420	2,864		
강진	2,946	2,775	2,833		
해남	-	3,240	2,912	3월 결정	
영암	3,132	2,707	2,919		
무안	3,228	3,228	2,958	동결	
함평	2,898	2,520	2,848		
영광	3,042	3,504	2,960		
장성	-	3,240	2,880	이달 초 결정	
완도	2,724	2,724	2,869		
진도	2,829	2,747	2,828		
신안	3,096	3,600	2,800		

반면 전남지역은 기준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의정비를 결정한 자치단체가 많다.

### 시민단체 '퍼주기식' 반발

목포는 기준액(3천168만원)보다 높은 3천390만원, 순천도 기준액(3천115만원)보다 높은 3천223만원, 광양도 3천672만원으로 기준액(3천306만원)보다 높게 책정했다. 이외 담양 2천966만원(기준액 2천866만원), 곡성 2천903만원(기준액 2천828만원), 구례 2천976만원(기준액 2천785만원), 고흥 2천947만원(기준액 2천879만원), 화순 3천144만원(기준액 2천920만원), 강진 2천946만원(기준액 2천833만원), 해남 3천63만원(기준액 2천912만원), 영암 3천132만원(기준액 2천919만원), 함평 2천898만원(기준액 2천848만원), 영광 3천42만원(기준액 2천960만원), 진도 2천829만원(기준액 2천828만원) 등 대부분 자치단체의 의정비가 기준액보다 높게 책정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 ■ 균형발전특위 뭘 논의했다

# 호남고속철 조기 개통 등 획기적 대책 요구

"8일 발표할 지방발전 대책에 획기적인 것이 없으면 지방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다" "도대체 현 정부의 지방발전 대책은 신뢰할 수 없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 회의에서 비수도권 의원들은 이같은 분노를 표출했다. 의원들은 저마다 지방의 폐쇄된 경제 현실을 예로 들며 지난 10월말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이후 '비수도권 기업의 수도권 유턴'과 '지방 투자 백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방경제의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들은 나아가 획기적 수준의 지방발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에 가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정도를 넘어서 민심이 흉흉하다"고 입을 연 뒤 "수도권 개발이익을 어떻게 이전하나. 또 기껏해야 수천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결속본이 심각한 수준인데 내년에 보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정부의 지방대책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혁신도시 문제와 관련, "이전 계획 승인 대상 기업 선정을 빨리 확정해야 하고 지가를 인

근 산단 수준으로 인하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지방은 지난 10월말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 이후 분노를 참고 있다"며 "8일 지방 대책이 임시방편적으로 나오면 그 분노가 견줄 수 없게 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지방 대책의 본질은 일시적 예산 지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8일 대책에는 호남고속철 조기 개통과 무안공항 경유 등 획기적 사항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광주와 전남이 '5+2

광역경제권'의 재편을 요구하는 것은 광주·전남과 전북의 산업 연관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며 "기존 정부의 안대로 된다면 호남의 소외는 고착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 수도권 일부 의원들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움직임과 관련, "지역민에게 분노와 좌절을 안겨왔다. 이는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정부가 지방발전 대책으로 내년 지방 예산을 9.3% 증액한 것에 대해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2.6% 증액해 놓고 그 정도가 어떻게 대폭 늘린 것이냐"고 꼬집은 뒤 "또 SOC예산 증액분의 90%를 지방에 배정했다고 했지만 수도권에 투자할 대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이날 보고를 통해 오는 8일 발표될 지방발전 대책과 관련, ▲기초생활권 전 대책 ▲지방의 삶의 질 향상 대책 등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5.18정신은 '아시아문화전당' 안에 살아 숨쉬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내 5.18관람공간 8개 중 도청본관을 포함한 7개 관람은 원형 보존됩니다.

**5.18정신을 담은 아시아문화전당**

5.18정신을 담은 아시아문화전당은 5.18관람공간 8개 중 도청본관을 포함한 7개 관람은 원형 보존됩니다.

5.18정신을 담은 아시아문화전당은 5.18관람공간 8개 중 도청본관을 포함한 7개 관람은 원형 보존됩니다.